

주요 정책 이슈

- 2013.11.8,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-

① (금융) 국내외 시장동향 및 기업 부실 사전방지제도 정비

- (시장동향) 최근 국내금융시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**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**, 향후 美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급격한 자금이동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
 - 한편, '13.3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.80%로 전분기(1.73%)대비 0.07%p 상승하였으며,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액 신규부실 발생으로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(2.33%)이 전년동기대비 0.40%p 급증
 - 금융위는 국내외 경기의 본격 회복 지연 및 대기업 추가부실 우려에 따라, 대기업 계열이 적시에 선별·관리되도록 주채권은행의 대기업 계열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*를 대폭 정비
- * ① '주채무계열' 편입 대상을 '금융권 총신용공여액 * 0.1% 이상' 에서 '0.075% 이상'으로 확대
② 점수구간 세분화, 비재무평가항목(지배구조, 산업위험 등) 계량화 등 평가방식 개선
③ 주채무계열 중 재무개선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나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을 '(가칭)관리대상 계열'로 선정·관리 등
- (전망) 주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채권단이 관리하는 대기업이 현재(30개)보다 약 13개 늘어날 전망(국민일보)

② (과학기술정책) 미래부,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연구개발 본격 착수

- (주요내용)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'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' 신규과제 선정
 - 암 치료 부담 증가, 아동·청소년 비만,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3개 분야에 향후 3년간 약 270억원 지원
- (평가 및 과제) 암, 비만, 유해물질 등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들로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 적용을 위한 법·제도 개선,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

<참고> OECD, 삶의 질 지수*(Better Life Index, '13.11.5 발표)

-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.0으로 OECD 평균 6.6보다 낮음
 -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세(OECD 평균 80세)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,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37%로 OECD 평균(69%)보다 크게 낮음
- * 주요 36개국(34개 회원국+라브라질) 대상 주거환경, 수입, 고용, 삶 만족도 등 11개 지표 평가

[별첨] 노동소득 비중 감소 및 시사점

노동소득 비중(labour's share) 감소 및 시사점

- “A shrinking slice” (’11.2, The Economist) 요약 -

- 전세계적으로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(labour's share) 비중이 감소
 - 미국의 노동소득 비중은 70%(1980년) → 64%(2012년)으로 낮아짐
 - * 독일, 일본 및 북유럽(노르웨이(64%→55%), 스웨덴(74%→65%) 등), 아시아도 유사한 경향
 - * 한국 : 90% 이상(1980년대 초반) → 80~85%(1990년대 초반) → 70~75%(2000년대 후반)
 - 또한, 미국 하위 99% 근로자의 소득 비중도 1980년대 60%에서 50%로 하락
- 노동소득 비중 감소를 양극화 논의(polarized debate)와 연계시키면서 다양한 원인이 제기
 - 진보(left) 측에서는 대기업의 탐욕 및 노동조합의 약세를 원인으로 제시하는 반면, 반대(right) 진영에서는 큰 정부와 높은 세율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함
 - IT 기술혁신에 따라 소수의 고기능 근로자만이 가파른 임금 상승의 수혜를 입은 것과 달리 다수의 미숙련 노동은 자본/설비로 대체가 가속화된 것도 원인
 - 중국과의 무역 확대 등 세계화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존재
- 저임금, 저기능 노동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장 지향 및 고용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
 - 자본-노동간 대체를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 또는 운영 역량 교육을 강화 (math 보다는 mechanics를 교육)
 - 소극적인 고용 보호 또는 기업에 대한 징벌(punishment)이 아닌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
 - *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자본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율 차이를 줄이는 것도 고려

- 역설적이지만, 연금제도 개혁이나 광범위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일반 노동자의 자본 소유(capital ownership)를 높이는 것도 방법
- * 이른바 “popular capitalism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

※ (관련 문서) 「산업간 노동이동성 분석 및 시사점」 (13.10, 한국은행)

- 최근 한국경제는 노동이동성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, 그 방향도 고부가 제조업에서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이동이 대부분
- IT 기술발전 등 제조업 진입의 기술장벽 심화,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등이 노동이동성 정체의 원인
- 산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이 빠르게 증가
- 금융·보험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정체되고 있으며, 사업·개인·공공 서비스 부문이 증가 추세

□ (정책적 시사점)

- GDP 중 노동소득의 비중 축소는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기업활동이나 산업별 고용구조 등을 고려한 정책방안 모색 필요
- 또한, 산업·부문간 생산요소(노동) 이동 등 고용구조 재편이 국가 경제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약하거나 고용 증대에 따른 성장 효과를 약화시키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·대응 필요

< 주요국 명목GDP 중 노동소득 비중 (%) >



<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 (%) >

